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수 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4 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416network@gmail.com 02-2285-0417)
제 목 [보도자료]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및 추모지원에 관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5. 7. 29. (총 15쪽)

보 도 자 료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및 추모지원에 관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인양 특별과제 3개, 진상규명과제 33개, 안전사회대책 24개, 추모지원 22개 과제 등 총 82개 과제 발표
 - 세월호 선체의 유실방지 실태에 대한 영상공개
- 일시 장소 : 7월 29일 (수)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1.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운,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이 공동 주최하고, 4.16연대 부설 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 안전사회위원회, 수습인양대책위원회(준)가 공동주관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발표된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및 추모지원에 관한 82대 과제>는 △세월호 인양 관련 특별과제 03개, △진상규명을 위한 11개 영역 33개 과제, △안전사회 대안마련을 위한 4개 영역 24개 과제, △추모와 지원을 위한 6개 영역 2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과제들은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정부, 국회,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대안을 마련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과 사회단체들, 언론에게 제안하는 필수과제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4. 4.16 4.16가족협의회는 취지문에서 “2014년 11월 19일, 5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으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정부는 집요하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더 이상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문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없다”고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이 자료를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오늘 발표한 개략적인 과제와 별도로 몇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또한 인양 특별 과제 발표와 더불어 세월호 선체의 유실방지 실태에 대한 영상(현재 선체 상황)을 공개하고 유실방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들 주도의 수중촬영작업을 정부가 허용할 것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자료집, 선체의 유실방지 실태에 대한 영상은 4.16연대 홈페이지[www.416act.net]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붙임자료 2. 82대 과제를 발표하며
- 붙임자료 3. 82대 과제 요약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1.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기자회견 개요>

제 목 |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7월 29일 (수) 오전 11시

장 소 |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주 최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주 관 | 4·16연대 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안전사회위원회, 수습인양위원회(준)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 안병욱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4.16연대 상임위원)

발 표 |

1) 진상규명 과제

박주민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상임위원
(4.16가족협의회 변호사)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2) 안전사회 과제

최명선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3) 추모지원 과제

박진 4.16연대 운영위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4) 인양 특별과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

질 의 |

※ 참석자 및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2. 취지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를 발표하며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우리는 모두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보았고, 단 한명도 구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적폐’와 관피아, 해피아, 기레기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진실규명을 외칠 때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를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안전산업 발전방향이었습니다. 각종 비리 책임자들은 무죄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불온시하고, 시민들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정부

2014년 11월 19일, 5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모여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제1조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사권한이나 진상규명 방법 등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지난한 노력과 그에 함께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집요하게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정부는 3월 5일에 야 특별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여 진상조사가 과건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내용으로만 조사를 한정하도록 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민간인 조사관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아직도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사무처장은 계속 업무를 해태하다가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왔습니다.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을 뿐, ‘어떤’ 진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그것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100대 과제를 밝힙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을 말합니다.

먼저 세월호 인양에 대한 특별과제를 밝힙니다.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에 남아있는데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시신과 유품 유실 방지설비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런 가족협의회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참여 보장과 인양과정의 투명한 공개, 신속하고 제대로 된 인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결과 조타미숙이 세월호의 침몰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만 확인되었고 진실은 아직 묻혀있습니다. 재판결과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123정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는데도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란했던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국 눈가리개였을 뿐입니다.

침몰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안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안전산업 발전방향이었으며, 적폐로 지목된 세월호참사의 원인제공자들인 비리의 당사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선박안전기술공단에는 비리혐의자들이 특채되어 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만든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쓸모 없는 기관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인 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자력발전소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합니다.

추모와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가족들 앞에 돈을 흔들며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배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삶의 원상회복이라는 대전제는 간 곳 없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없는 일방적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배보상, 피해자들 사이에 경중을 나누고 갈라치기하는 행태, 추모하는 마음을 불온시하고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정부의 행태, 이 모든 현실을 뒤집어 온전한 추모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00대 과제” 를 밝히며 요청 드립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특별조사위의 권한으로는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활동에 대한 비협조를 비롯한 방해공작, 나아가 특별조사위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원망과 분노만 높이는 조사 활동과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진상은폐위원회로 변질시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한다면 역사적인 특별조사위는 제 역할을 못한 채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시간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특별조사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피해자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100대 과제는 특별조사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은 아닙니다. 특별조사위가 이보다 더 많은 활동으로 분명한 안전한 한국사회 건설에서 분명한 족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오늘 “100대 과제” 를 밝히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의 명령인 이 과제를 받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이 100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의 싸움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했던 여러 시민들에게 이 과제의 완수를 위해서 중단 없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없다면, 이 100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시민들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의지가 없다면 이 지난한 싸움은 미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100대 과제”를 기억하고 알리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과제를 제출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없습니다! 진실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3. 82대 과제 요약

세월호 인양 3개 특별과제

1. 세월호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
2. 인양 전 과정은 가족의 참여 아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한 공식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3. 인양 준비와 실행 전 과정에서 시신 유실 방지 및 선체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상규명 11개 분야 33개 과제

I.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

1. 최근 이루어진 선박관련 규제완화 조치는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2. 사고방지시스템의 형해화(形骸化)는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 2.1. 부실인사
 - 2.2. 피감독자와 감독자의 유착
3.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구조능력약화
 - 3.1. 수난구호법개정과 구조업무의 민간이양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하여 왔는지
 - 3.2. 구조에 대한 예산 투입 부족과 훈련의 부재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도하여왔는가

II. 청해진과 세월호를 둘러싼 감독의 무력화

1. 청해진의 세월호 구입자금을 위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을 누가 가능하게 했으며,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2.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부실한 승인, 잦은 불법적 출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3. (주)아해 등에 대한 창조경제자금 지원

III. 참사의 직접적 원인

1. 사고 전날 무리한 출항이 가능하도록 여행사의 설득이 있었는지
2. 부적법한 출항이 이루어진 배경
3. 사고원인과 사고상황
 - 3.1. 정확한 사고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 3.2.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 3.3. 참사 당시 진도VTS의 부실한 관제

IV. 해경·해군의 잘못된 구조와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1. 해경의 잘못된 구조
 - 1.1. 해경은 왜 선장과 선원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였는지
 - 1.2. 해경은 왜 해군 등 외부 구조세력을 배제하였는지
 - 1.3. 해경은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 1.4. 해경은 왜 선내 진입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 1.5. 해경의 지휘라인은 적절한 지시를 하였는지
2. 해경의 진상은폐시도
 - 2.1. 첫날 투입된 잠수사의 수를 과장했는지
 - 2.2. 해경은 사망자 수습 과정을 왜곡하고 지연시켰는지
 - 2.3. 에어포켓은 존재하였는가
 - 2.4. 시신수습에 대한 순차보고 시도 등 보고지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2.5. 해경 구조 동영상 원본을 왜 삭제하였는지
3. 해군의 역할
 - 3.1. 세월호 침몰 직전 인근 해군함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 3.2. 인근 해군 함정들이 초기 구조활동에 왜 적극 참여하지 못했는지

V. 재난통제시스템의 부재

1.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지
2.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는 누가 초래하였는지

VI. 청와대의 부실대응 및 진상은폐시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1.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상황과약을 했는지
2.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적절하게 보고받았는지
3. 대통령은 과연 지시를 하였는지
4. (지시를 했다면)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는지
5. 대통령의 7시간
6. 청와대는 해경 등 구조세력에 적절한 지시를 하였는지
7.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을 통제하였는지

VII. 언론의 오보

1. 전원구조오보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2. 대규모 구조세력 투입보도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3. 유병언에 집중된 보도는 누가 주도하였는지

VIII. 수사기관 등의 은폐시도

1.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 1.1. 해경은 왜 선장을 해경의 집에, 선원들을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는지
 - 1.2.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왜 해경을 구성원으로 하였고,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계속 유지하였는지
 - 1.3. 123정장만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IX. 참사 초기 피해자 인권침해

1.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의 상경을 저지한 것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2. 사찰시도
3. 유언비어 유포와 정부의 무대응

X.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1.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원과는 어떤 관계인가
2.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로비는 없었는가
3. 유병언은 어떻게 사망했는가
4. 유대균이 국정원지적사항 파일이 공개된 날 전격 검거된 것은 과연 우연인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XI. 실소유주 논란

1. 세월호는 사실상 국정원이 소유한 배 아닌가
 - 1.1. 세월호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은 어떤 경위에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
 - 1.2. 세월호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은 왜 등장하는지
 - 1.3.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사회 대책 4개분야 26개 과제

I. 세월호 참사 관련 법령·제도 검토 및 선박사고의 예방

1. 선박의 안전성 기준 점검과 그 개선
 - 1.1. 선박 적정성 기준 점검 및 개선
 - 1.2. 선박 안전점검 현황 조사 및 개선 1
2. 과적·과승 및 적재의 현황 점검과 개선
 - 2.1. 과적의 현황 및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2.2. 과승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2.3. 적재 방식의 개선
3. 사고 대비책 점검
 - 3.1. 시설 및 장비 점검
 - 3.2. 구조 훈련 점검
4.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4.1. 선박검사 제도의 문제점 점검 및 대안
 - 4.2. 운항관리제도 점검 및 강화
5. 운항시 책임과 권한 재정비
 - 5.1. 선장의 책임 강화
 - 5.2. 사고 시 선박소유주의 책임 강화
6. 안전의 현장책임주체로서 선원의 현실 조사
 - 6.1.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 6.2.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방안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7. 과거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 7.1. 연안여객선 및 유람선 사고에 대한 조사
- 7.2. 어선 사고에 대한 조사

II. 안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점검

1. 안전규제 후퇴에 영향을 미친 법제도, 정책에 대한 조사
 -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정책적 타당성 점검
 - 1.2.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전규제
 - 1.3.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점검
2. 민관유착 등 정부의 안전감독의무를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의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2.1. 소위 ‘관피아’ 등 민관유착의 부패구조에 대한 총체적 점검
 - 2.2.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3. 안전위험업무/유해물질 취급업무 외주화 정책에 대한 점검
 - 3.1. 공공기관, 공사 외주화 상황 점검
 - 3.2. 민간기업의 위험업무 외주화 현황 파악 및 문제점 검토
 - 3.3. 각종 사업주 단체의 안전점검과 인증 상황과 비리 조사
4. 공공영역의 민영화 점검
 - 4.1. 민영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사
 - 4.2.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업무 민영화
 - 4.3. 구조구난 업무의 민영화
5.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
 - 5.1. 안전규제 어길시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
 - 5.2. 기업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방안
6. 안전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방안
 - 6.1. 위험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권리 보장
 - 6.2.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 보장
 - 6.3. 안전위험업무의 적정인력 배치와 정규직화
 - 6.4. 안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검토
7.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보장 방안 마련
 - 7.1.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보장
 - 7.2. 원전·유해물질 정보 공개
8. 재난사고의 책임있는 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 마련
 - 8.1. 역대 재난사고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현황 조사
 - 8.2. 기업 및 기업책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 마련
 - 8.3. 재난사고에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 마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9.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 총 점검

- 9.1. 정부의 안전대책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 9.2. 조직 체계 점검

III.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영역별 검토

1. 철도·지하철·버스·항공 등 대중교통 안전

- 1.1. 안전 규제
- 1.2. 인력충원 및 노동자의 권한
- 1.3. 정부의 관리감독
- 1.4. 시민의 감시
- 1.5. 과거 사고에 대한 사례 조사

2. 건물·시설의 안전

- 2.1. 안전 규제
- 2.2. 인력충원 및 노동자의 권한
- 2.3. 정부의 관리감독
- 2.4. 시민의 감시
- 2.5. 과거 사고 사례에 대한 조사

3. 방사선 피폭·화학물질 누출로부터의 안전

- 3.1. 안전 규제
- 3.2. 인력충원 및 노동자의 권한
- 3.3. 정부의 관리감독
- 3.4. 시민의 감시
- 3.5. 국내외 사고 사례에 대한 조사

4.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

- 4.1. 기업의 책임강화
- 4.2. 노동자의 권한
- 4.3. 정부의 관리감독
- 4.4. 시민의 감시
- 4.5.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산업부문별 대책 마련
- 4.6.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사례에 대한 조사

IV. 안전사회를 위한 재해·재난대응체계 수립

1. 재해·재난 대비 체계

- 1.1. 재해·재난 대비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제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 1.2. 재해·재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 1.3.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참여시스템의 구축
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방안 마련
 - 2.1. 내실있는 안전교육 방안 마련
 - 2.2. 안전사회를 위한 언론의 의무
 - 2.3.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기업문화의 구축방안 마련
3.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대응체계
 - 3.1. 과거의 재해·재난사고에서 구조구난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교훈도출
 - 3.2. (조직) 정부의 구조대응체계의 점검과 대안
 - 3.3. (하드웨어)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한 정부의 전문인력과 장비 등의 점검과 대안
 - 3.4. (대응매뉴얼) 재해·재난발생시 구조대응매뉴얼의 적정성 점검과 대안
 - 3.5. 재해·재난 발생시 언론의 역할과 의무
 - 3.6. 재해·재난 유형별 구체적인 구조구난대응체계 마련
 - 3.7. 새로운 구조구난대응체계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정예산 마련
4. 재해·재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시스템 마련
 - 4.1. 과거의 재해·재난사고에서 진상규명 등을 위한 조사체계의 적정성 검토
 - 4.2. 현재의 사고조사위원회 체계의 적정성 검토
 - 4.3.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위한 방안 마련
 - 4.4. 사고조사위원회 인력기준과 예산기준 검토

추모지원 6개 분야 22개 과제

I. 재난참사 피해(자)의 정의와 범주

1. 국제적 수준의 포괄적 피해(자) 정의와 범주 정립
2. 피해자의 가해자화에 대한 국가 책임

II. 세월호 피해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점검

1. 피해자 전수조사는 지원대책의 출발점
2.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법제도 정비와 참여 보장
3.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사업 지원
4. 재난참사로 이후 피해 확산 확인과 지원(지역 공동체 치유, 복원 등)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가족협의회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5.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III. 세월호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1. 생애 주기 적 관점의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
2. 생계지원 대책의 현실화와 수혜 범위의 확장
3. 학업, 노동, 사회적 관계 복원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권고

IV. 참여와 소통에 기반 한 추모 사업 준비

1.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추모사업과 추모·지원위원회(피해지원법)에 대한 권고와 제언
2. 추모 사업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정부와 관련 기관이 추모 사업의 전 과정에 책임 있게 나서도록 해야 한다
4. 추모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5. 기억을 위한 기록의 보관은 추모의 시작

V. 국내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지원 지침 마련

1. 세월호 참사와 국내 재난참사의 지원 대책 수립에 적용할 준거 마련
2. 지원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3. 생애주기 관점의 모니터링과 평가 가능한 법제도 마련
4. 포괄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 받을 권리 보장

VI.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건강한 사회적 소통 방안 마련

1. 특조위와 피해자의 일상적 소통 체계 구축
2. 언론 보도와 사회적 의사소통 기준 마련